

행정복합도시의 입지에 따른 충청남도의 지역발전 연계방안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Chungnam Province in Conjunction with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심 문 보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As the establishment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has been decided in chungnam province, This study aimed at understanding how to influence in the province and to seek development method of the chungnam province. The establishment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has been influenced on increase population influx, to create employment, to give rising to production, and to increase economic activity. also, It can see many other positive sights in the re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making regional center and taking bring to change the residents ,

In conclusion, the development of strategy of the chungnam province will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shall be planed the development strategy of in and around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Second, It shall be needed infra-enlargement in accomplishing The City is a central function of our country. third, It shall be establish new growth industrial center has economy power in east-aisa, forth, It will be needed the win-win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the community of the conservation of nature. last,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ward jumping central region in country

키워드 : 지역공간구조, 지역경제, 광역도시권, 신 성장산업, 상생협력, 제도개선

Key Words : regional-space-structure, regional economy, broad town area, win-win cooperation, system improvement

I. 서 론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지역은 국제적으로 해양적 접근성이 양호한 서해안과 대중국 교역의 관문항을 갖추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국토중심부로서의 교류중심지, 수도권 기능분담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지역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을 담보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후보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연기·공주지역은 수도권과 8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인구면적·산업분포 면에서 국토의 중심점에 해당한다. 또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의 접이지대로서 강원지역과 더불어 전국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고, 인근에 청주공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로서 갖추어야 할 공항과의 연결성이 확보되는 교통중심지이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라 인근 지역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으며, 실제로 부동산 투기로 인해 지가가 급상승하고 지자체별로 과도한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도시의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개발을 담보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인근 인근 도시·지역에서 추진 또는 계획 수립 중인 주요 개발사업의 규모·내용 및 추진일정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새로운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나 현 상황에서는 정부축을 중심으로 주요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 도시간의 교류 기반이 약한 실정이다.

수위도시인 대전시나 행정도시 중심의 단핵집중적 공간구조를 지양하고 광역권내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광역권 공간구조를 행정도시-대전-청주를 중심으로 주변에 공주, 연기, 진천, 증평, 계룡 등의 2차 중심지가 연계되는 다핵분산형 도시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중심지 간 순환망 위주의 간선교통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광역권내 주요도시 및 시가지간 간선교통체계를 보완하고, 대전-행정도시-청주 간 간선도로 보완 및 청주공항, 오송역 등 교통결절지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며, 대도시인 대전, 청주의 도시 내부 공간통합성 및 내부순환 교통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충남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충청남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공간구조, 지역경제,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주변지역과의 관계, SOC 인프라 구축, 성장산업, 인접한 자치단체간의 상생협력 및 제도개선방안 등을 중

심으로 지역발전 연계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II.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지에 따른 변화 및 전망

1. 공간구조 변화 및 전망

1)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 직접·간접영향권지역으로 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토의 새로운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주변도시들의 기능변화가 예상된다. 공주시와 연기군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대전광역시, 천안·아산시, 논산시, 금산군 등 행정중심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은 직접영향권지역으로 공동생활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직접영향권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충청남도 내륙 및 서해안지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간접영향권지역은 사회간접자본확충을 통한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시·군간 접근성 제고

현재 건설중인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서천~공주간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남도내 시군간의 접근성을 급속히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청이 있는 대전광역시와 태안, 서산, 당진의 경우 2시간 30분에서 3시간이 걸리는 거리지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2시간이 걸리는 서천 및 보령 등 서해안 남부지역도 1시간이면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남 시군지역, 충남 지역내 시·군지역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공간적 상호작용과 통합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형 광역도시 형성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의 대전·청주광역도시권, 천안·아산광역도시권과의 상호연계 체계가 강화되는 "네트워크형 광역도시"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도시간 연담회를 통한 메가로폴리스(거대도시)의 형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최대 인구규모가 50만에 불과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대전광역도시권, 청주광역도시권, 천안·아산광역도시권간

의 상호 연계를 강화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형 광역도시권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나머지 지역과도 공간적 상호작용과 통합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공간적 분화(Spatial Divide)와 지역내 발전격차 심화 가능성

공주, 연기, 오송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연접지역은 각종 기능의 입지, 토지개발 수요 증대 등 근교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한편 난개발, 연담화, 경관과 환경훼손 등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다. 천안 아산 등의 서북부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효과, 고속도로 효과, 수도권 규제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서해안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당진, 서산, 홍성, 보령, 서천 등의 직접영향권 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효과로 관광객과 기업입지가 증가하는 한편, 지역상권의 이탈로 상업·서비스업이 악화되고 있으며, 서해안개발축상에서도 개발 집중지역과 소외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 반면 예산·청양·부여 등 내륙지역은 농업의 쇠퇴,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한편, 부정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 지역경제 변화 및 전망

1)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클러스터 형성

외국의 행정수도 사례연구에서 산업클러스터로 적합한 산업으로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군사산업, 교육, 문화, 관광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충청남도 5대 전략산업이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농축산바이오, 관광, 문화산업 등 임을 감안해 보면 외국의 행정수도 산업클러스터 산업과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클러스터 형성은 5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제활동효율성 증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경제활동효율성을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추정 한 한국은행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면, 관련 서비스업의 발달,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에 따른 간접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03). 즉, 정부기관과 관련이 있는 단체, 연구기관 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정보 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국제기관의 일부이전에 검토되어 국제적 자본유치 및 정보교류에 유리하고, 중앙 행정기구와의 접촉 편의 증대로 재정, 금융, 공공사업 인허가와 관련 정보 획득이 유리해 짐에 따라 일부 대기업의 본·지사가 이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또한 도로, 공항, 항만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따라 생산비 인하, 생활편의 증진 등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지역 중추기능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부속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국가 중추관리기능의 분산으로 수도권 일극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는 서울 - 중심, 지방 - 주변이라는 인식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중추기능 강화는 국토의 새로운 중심지로서의 역할수행이 가능하게 되고, 그 파급효과가 인접지역으로 전파되어 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시화의 진전과 농업생산성의 증대 등으로 초래된 이농현상과 도시인구 유입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 인프라시설의 확대 구축은 산업생산성 증대와 비용구조 개선을 통해 충남에 입지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건설과정에서의 노동인력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중추기능의 집적으로 수도권 등으로부터 인구유입이 이루어지면서 노동력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따라서, 집적의 이익(Agglomeration Economy)이 발생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5) 지역간·계층간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격차 심화

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등 대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정에서 충청권으로 유입되는 인구와 산업의 일부를 흡수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인접 중소규모 도시는 인구와 산업, 토착자본 등의 유출과 같은 역류효과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도시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도시·지역 내에서도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계층들은 부동산가격과 임대료의 상승으로 생활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3. 사회·문화 변화 및 전망

1) 지역민의 자긍심 강화에 기여하나 갈등수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서울~지방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종전에 볼 수 없는 강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명예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중국적으로 애향심 고치, 귀속의식 강화를 통한 지역유대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거주해온 삶의 터전이 상실됨에 따라 주민공동체의 해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행정중심도시 건설의 계획적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중앙의 정치적 상황도 무시할 수 없지만, 보상과정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제한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조직적인 반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교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정부기관 및 국책연구원 등이 입지함에 따라 교육 및 연구기능의 양적확대 및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 입지한 대학들의 협력 및 제휴가 가속화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표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선호도 증가는 지역중고등학생의 역외유출의 감소와 더불어 우수한 학생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청남도의 지역발전전략

1.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의 광역도시권 육성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된 광역적 차원에서의 중장기 도시발전계획의 재정비와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에 유입될 인구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광역교통망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교육, 복지, 문화·예술, 산업경제, 물류,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는 천안·아산시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과 경부축선상에 위치한 지역 등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해안권에 위치한 서천·태안군 등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경부축선상이나 인근지역에 건설될 경우

지역간 발전격차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국토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과밀 및 집중을 분산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의 계획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의 분산 및 정비를 해소하는 소극적인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지할 충청권을 또 하나의 국토핵심공간으로 상정하고 타 지역과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남의 연계발전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의 목표와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충남지역은 국토의 중앙이라는 유리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미흡한 편이며 특히 항만, 공항 등 일부 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물류비 등 원가부담 증대 요인으로 작용, 지역소재 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충남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도로망

광역도로망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권과 충남 내륙 및 서해안권과 횡적연계망 구축을 강화하고, 경부 및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량 분담, 인천공항과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충남서해안의 거점도시로서 신도청소재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권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고속화도로 신설이 요구된다. 국가기간망 도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보령~공주간 고속도로는 서해안관광 및 물류기능 수행, 서해안고속도로 기능분담 차원에서 건설일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당진~상주간 고속도로 구간중 공주~청원간 고속도로 역시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경부고속도로 및 호남고속도로에 대한 부하를 경감하고 동서간 연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부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수도권분산고속도로(안성~천안~연기~행정중심도시)와 인천공항접근고속도로(평택~아산~공주~행정중심도시)가 계획되어 있다. 인천공항접근고속도로는 국가기간망도로 계획의 보령~공주간 고속도로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유구까지 연결한 다음 행정중심도시로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철도망

철도망은 국가간선철도망계획(2005)에서 제시된 충청선철도 건설시기를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금강권역의 개발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보령~공주~조치원을 연결하는 충청선 철도는 국가간선철도망계획에서 2020년 이전에 착공이 계획되어 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더불어 서해안과 동해안의 연계강화를 도모하는 물류중심 및 다양한 관광자원의 연계를 위한 관광중심 철도로서의 육성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금강유역권의 개발활성화 및 호남지역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금강선철도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금강선철도는 충청남도의 역점시책 중인 금강광역복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전라북도와 협력 하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획득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도 자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3. 충남도청소재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개발거점 육성 및 광역도시권 형성

충청남도 도시의 특징은 거점도시가 편재되어 있고 도시체계가 미진하다는 점이다.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시는 도의 동북단에 치우쳐있어 충청남도 전역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선도하는 개발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

서해안지역과 중부내륙지역은 몇몇 시·군중심지를 중심으로 배후지가 분할되어 있는 도시체계를 이루고 있어 외부충격에 약하다. 이는 대부분의 시·군중심지들이 배후 농어촌에 대한 서비스중심지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와 농어촌인구 감소에 따른 구매력 감퇴에 의해 주요기능인 상업·서비스업 기능이 영세화·사양화되었으며, 제조업 등 도시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업부문의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 외부의 중·대도시의 영향력 확대로 도내 시·군생활권의 자족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천안·아산·당진·서산은 수도권, 공주·논산·금산·연기는 대전광역시, 조치원은 청주시, 서천은 군산시의 영향권에 속한다.

따라서 고차 상업·서비스 기능일수록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천안시의 영향권이 확대되고 있으며, 교통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과거에 비해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

상되고 지역주민들의 중대도시 지향성이 강화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충청권 건설은 도시권의 광역화를 촉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남의 중소도시들의 자생력은 점점 더 약화될 것이 예상된다.

기존의 경부축과 서해안과 내륙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충남도청소재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해안 개발거점인 도청소재도시 육성으로 환황해 경제권의 세계 주요 경제단위 부상과 중국과의 교역 급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환황해 경제권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표 1> 도시별 역할분담방안

구 분	기 능
행정중심복합도시	쾌적하고 편리한 생태·정보도시를 근간으로 청사/교육·문화·의료·생활편익 기능이 완비된 자족도시
도청소재도시	충청남도 행정 및 공공기능 중심도시, 서해안개발거점도시
대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의 서비스 제공 역할 강화(교육, 문화, 오락, 주거 기능), R&D특구로서 IT, BT, CT 등의 연구기능 및 생산기능 강화
천안·아산	전자/정보기기 관련 대기업본사·수도권 대학이전 수도권에서 이전되는 생산기능 수용
논산·계룡	국방관련 연구기관, 군수관련산업 집적화
공주·부여	신개념의 역사문화 관광지 및 문화산업 특화
연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도시간 물류유통기능 분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충청권건설은 기존의 수도권과 함께 중부권을 국토의 핵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 청주, 천안을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충청권 3개 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인접도시간 네트워크형 광역도시권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 중심도시, 대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 천안·아산·연기·공주·논산 등은 적정규모의 전문화된 도시 등으로 도시별 기능을 분담하

고 상호보완적이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도시권 전체에 대한 체계적 성장관리를 통해 난개발 제어 및 통합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4. 지역대학경쟁력 강화 및 교육혁신체제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충청권지역 대학들의 입학수요 증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전광역시에는 4년제 대학 11개, 전문대학 6개, 충청남도에는 4년제 대학 19개소, 전문대학 10개소가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희망적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전·충남소재 대학들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간 통합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이은 수도권 대학들의 지방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5. 낙후지역 개발 및 문화관광기능의 강화

충남 낙후지역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충청권 건설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지리적으로 가까워졌다는 사실 이외에는 여전히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 175개 동읍면을 대상으로 토지·인구·사업체 부문의 총15개 지표를 이용하여 낙후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낙후지역은 충청남도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분포되어 있다.

낙후지역은 불리한 지형조건이나 농업환경에도 불구하고 국토와 환경보전, 수자원의 함유,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제공, 국민의 거주·휴양환경의 제공 등 다면적·광역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 도시-농촌교류, 한계농지이용 등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의 개발을 통해 지역특성에 기초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충청남도는 백제의 왕도인 부여와 공주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자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 섬 등 해양자연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

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충청권 건설에 따라 공공기관을 찾는 외국인들의 방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남지역의 관광인프라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관광자원,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자연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문화관광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6.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의 U-City 기반구축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로망, 전력망, 철도망, 상하수도망 등 지금까지의 도시인프라만으로는 미래도시의 성장원동력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대전과 충남이 지역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효율적인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U-City기반구축을 협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광역도시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 생태도시,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첨단정보도시, 공공서비스가 기능적으로 복합화 되어 제공되는 도시, 시민들의 삶이 안전하고 즐거움이 보장되는 도시, 도시내 통합센터에 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로 도시기능이 운영되는 도시, 중앙정부와는 구분되는 지방 거버넌스 행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도시, 행정도시와 주변 중소도시간 정보를 매체로 하는 도시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7. 자연환경보전 및 자치단체간 상생협력 강화

1) 자연환경보전과 친환경적 관리체계 구축

환경오염 및 훼손에 광역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환경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과밀개발을 지양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도시개발을 지향하며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우수한 자연녹지·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 토지이용 및 개발의 원칙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연환경 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을 잘 보전하고 이를 여가시간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역적 문화·여가자원으로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관광자원 및 시설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관광자원별 특화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대규모 광역체육시설, 생활권별 체육시설, 레저 및 위락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금강 수계의 하천 수질 보전 대책을 강화하고, 녹지축과 생태통로의 분절을 최소화 및 복원하기 위한 대책 및 도시계획 상 지침을 마련하며, 시가지내 녹지 확충

및 도시외곽의 공원-녹지와 내부의 공원-녹지를 연결하는 공원·녹지체계 형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시설 측면에서 인구 및 산업체 증가를 대비한 용수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하수도 및 폐기물매립장 용량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배수시설, 저수지, 유수지 등 방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기존시기에서의 인위적 재난방지 프로그램 구축 및 도시 내 안전관리시설 지정·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지역 간 갈등 방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

행정도시가 건설되고, 광역권 설정 및 지역별 기능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권 내외의 충청권 지역 간 갈등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도권과 행정도시 광역권의 경계지점에 있는 지역, 그리고 행정도시에 인접한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규제 계획 또한 많은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적절히 고려한 자원배분, 지자체간 개발욕구의 합리적 조정 등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행정정책 차원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광역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시설에 대한 원활한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지자체간 협력 및 국가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대전, 충남, 충북 광역자치단체들이 광역행정의 효율적이 처리를 위해 1995년 3월에 설치한 충청권행정협회의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또한, 충남·전북 지역간 협력·제휴를 통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충청남도과 전라북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2002년 10월에 구성한 충남-전북교류협력회의가 실질적으로 행정복합도시와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이 참여하여 2003년 2월 21일 창립한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상생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8. 국가중심지역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1) 행정중심복합도시 완공 이후 수도권 규제 개선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수도권 삶의 질을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지방의 자립기반을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드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

다. 더구나 이러한 지방의 침체와 수도권 과밀은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발전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적극적 지방육성정책과 더불어 적극적 수도권정책을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규제개선의 범위·추진시기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안)에서 서울은 금융과 국제업무 허브, 인천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경기도는 지식기반산업 및 남북교류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수도권세계도시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을 세계도시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도권 규제의 완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대두될 것은 필연적이다.

이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완공되기 이전에 수도권 육성대책이 지방육성과 동시에 추진된다면, 수도권에 비해 기반이 부족한 지방의 발전효과는 수도권의 발전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개선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의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건설은 지방이라는 연약한 지반위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외부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르칠 가능성이 높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중소도시에 대한 정부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가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적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실행정수도건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도시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도 건설되지 않은 가능성을 염려해 왔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논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자연히 주변 중소도시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지역내 균형발전에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지금도 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거나, 생활권이 종속된 중소도시들이 행정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권이 출현하면, 이 도시와 경쟁하여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도시에 재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 뿐 아니라 주변 중소도시들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

시 광역계획 수립시 주변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주변 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충남·경기 접도지역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원

충청남도과 충청남도는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은 중국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이용하여 지식창조형 경제특구 개발과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충남·경기 경제자유구역은 전자정보기기 및 자동차, 반도체, 철강산업 등 전략기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개발 기능과 항만물류산업을 집중유치하고, 주거·관광·위락·상업시설 등을 갖춘 신도시를 조성, 동북아 부가가치물류의 지역중추항만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복수의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국토계획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써 양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권을 선도할 수 있는 충남·경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과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수도권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정주환경 조성

행정도시가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인구를 최대한 흡수하고, 영·호남 및 강원권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차단하는 수도권 대체효과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흡인력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정부기관 뿐 아니라 행정도시 광역권 차원에서의 경쟁력있는 고용 기반과 주택, 도시인프라, 서비스, 교육, 문화 등 정주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특히 또한 인근 도시에서의 문화·여가·관광·의료 등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광역권 내 인구유출 및 감소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 기초편익시설 배치의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정주환경 정비 및 개선 대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행정도시 광역권은 첨단지식산업의 기반이 튼튼하고 장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기존의 연구단지 및 대학과의 연계발전 등을 통해 교육·연구 및 첨단기술의 혁신거점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IV. 결 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충남지역에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효과, 경제활동 효율성 등이 증대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중추기능 강화·주변도시들의 기능변화·주변지역의 불균형발전 등 지역공간구조의 개편, 지역주민의 자긍심 증대·주민생활 편의 및 복지증진·교육의 양적확대 및 질적 성장·지역이기주의확산 및 갈등심화·건설지연에 따른 주민반발 등 사회심리적인 영향과 같은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 충청남도의 지역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행정복합도시 광역권 및 주변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의 광역도시권을 육성하고, 광역도시권 네트워크 도시체계의 강화, 서해안권 및 내륙권 성장거점도시 육성 등이 필요하다.

둘째, 국토중심기능 수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다.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방사환상형 광역교통체계로 재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결되는 고속간선망의 재조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접근성 향상 및 물류수송을 위한 새로운 교통망의 신설 및 확충, 서해안 각 항만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내륙을 연결하는 대중국 교역창구로서의 기능 강화, 인천공항보다 접근성이 양호한 청주공항으로 거점공항의 이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동북아 경제권의 신성장 산업 중심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 산업클러스터 형성 및 산업발전 축을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자연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연환경보전 및 자치단체간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한 광역도시권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간 갈등방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협의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중심지역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완공 이후 수도권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중소도시에 대한 정부지원대책의 마련과, 충남·경기 접도지역에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지원 등이 필요하며, 수도권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영구·문경원·성태규. (200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해법 충청권 신행정수도건설. 충청권 행정협의회.
- 권용우. 92003). 수도권 문제와 신행정수도 건설의 방안. 「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자료집」. 대한지리학회.
- 김의준. (2003). 신행정수도건설의 지역경제 효과분석.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국토연구원.
- 김정연·전영노. (2001).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영향권 개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3권 제3호.
- 김정연. 9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한 충남지역의 발전전략」. 충남발전연구원.
- 남기범. (2004). 신행정수도 입지에 따른 공주시의 발전전략 I.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신행정수도 입지에 따른 공주시의 발전전략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 문경원.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의 건설과 대전의 연계발전전략.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권계획의 비전과 전략」.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충청지회 2006 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_____. 임준홍. (2006). 행정중심도시와 광역도시계획. 「글로벌시대의 대도시권 발전 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_____. (2003). 「정부대전청사의 이전 효과 분석」. 대전발전연구원.
- _____. (2003). 행정수도의 충청권 입지당위성과 기대효과. 대전발전연구원.
- 성태규·송두범·한무호. (2003).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의 당위성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송두범. (2004). 신행정수도 입지에 따른 공주시의 발전전략. 「신행정수도 입지 기념 학심포지엄 자료집」.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 _____. (2003). 신행정수도 건설과 충청권의 대응전략.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과제」. 한서대학교·충남발전협의회·한국비교정부학회 정책세미나 자료.
- _____. (2006). 충남의 입장에서 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권계획의 비전과 전략」,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충청지회 2006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_____. (2004). 신행정수도 건설과 충청권의 역할. 「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 _____. (1999). 「충청남도 조건불리지역 실태 및 개발전략」. 충남발전연구원.
-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2003). 「외국의 행정수도 이전사례」. 정책자료 2003-1.

- 신행정수도연구단. (2003).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 _____. (2003). 「행정수도이전의 효과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
- 윤상복. (2002). 일본의 중심시가지 재생전략. 「국토계획」, 제37권 제4호.
- 이경기. (2004). 신행정수도 광역도시권 설정과 주변도시 기능분담방안. 한국지역학회, 「신행정수도와 충청권 발전전략 구상 워크숍 발표요약집」.
- _____.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오송권의 역할.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권계획의 비전과 전략」.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충청지회 2006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이동수. (2003).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행정학회 2003년 춘계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행정학회.
- 이상호. (2004).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대전충청권 도시개발전략. 「한국지역학회, 신행정수도와 충청권 발전전략 워크숍 발표요약집」.
- 이왕건. (2004). 신행정수도 충청권 연계발전전략. 「신행정수도 건설전문가 대토론회 발표논문집」. 중도일보·충남발전협의회.
- 전명진. (2003). 「신행정수도 산업활성화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육성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_____. 허재완. (2003).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과급효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과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국토연구원.
- 조봉운. (2005). 21세기 충남지역의 발전전략과 추진과제. 「충남지역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최원희·조봉운. (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청권 지역구조 변화와 발전전략.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발전방안」. 충남발전협의회·충남발전연구원.
- 충남-충북대 ‘신행정수도 대학’을 꿈꾸다, <http://www.dtnews24.com>, 9월 23일.
-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03). 「한국지리지(충청편)」.
- 건설교통부.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안)」.
- 건설교통부·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 (2005). 「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
- 연기군.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연기군 발전계획」.
- 충청남도·국토연구원. (2001).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상 및 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
- 충청남도. (2004). 「내포문화권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 _____. (2000).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00~2020)」.
- _____. (2003). 「제3차충남권 관광개발계획」.
- _____. (2001). 「충남2010 정책비전」.

_____. (2004). 「충청남도 제1차 지역혁신5개년 계획」.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03). 「행정수도 이전논의가 충청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